

이낙연 '제3지대 신당 창당' 가시화 하나

“정치대안 불가피... 준비 시작” “尹·李 답 없어... 제3의 답 제시” 이준석과 연대 가능성도 시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보수' 진영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내비쳐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신당론'이 아닌, 실제로 창당 작업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강서대학교에서 열린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

정실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이제 막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대한 마음을 굳힌 것이냐’는 질문에 “어느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 가능성에 재차 힘을 싣는 발언에서 더 나아가, 사실상 창당 준비 작업을 진행중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불행하게도 지난해 대선부터 시험문제가 ‘윤석열,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세요’였는데 지금도 그 시험

문제가 그대로 있다”며 “이대로 내년 총선에 가면 3년째 시험문제가 똑같이 나와 국민들이 ‘답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억지로 고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3의 답을 제시해야 한다. 정답이 없는 시험지에 또 다른 답 하나를 올려놓는 것을 함께 할 단계가 왔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M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필요시) 바로 실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다. 그분이 가진 장점도 있다”며 “시기

가 되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신당 혹은 3지대 연대 가능성에 대해, “아무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위기 핵심이 정치위기에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이를 타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뜻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당 외곽의 지지세력을 지원하고, 당내 이낙연계나 비명(비이재명)계 공천 학살을 우려해 이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신당설을 띄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발언들이 조금씩 신당 쪽으로 구체화하면서 실제 창당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친이낙연(친낙)계 인사들이 주로 모인 원외 모임 ‘민주주의 실천행동’은 신당 창당을 위한 예비 당원을 모집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연일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결정한다면, 이낙연 신당 창당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비명계는 물론 병립형 회귀에 반대해 온 계파색이 열린 의원들도 ‘이낙연 신당’ 창당 움직임에 동조하는 지도부 반대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尹 “네덜란드·미국·일본과 반도체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앞으로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민 방문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된 AF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와 한국의 기여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신흥 기술에 대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간,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산업이 어느 때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산업·기술·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의 60%를 차지하는 한국과 세계 유일 노광장비 생산 역량을 가진 네덜란드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가장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해 왔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유인촌 문체 장관, 옛 전남도청 복원 이렇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8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과 만나 옛 도청 복원 추진

이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

민주 전략공관위원장에 안규백 의원

내년 총선 전략공천 방향을 지휘할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 위원장에 4선 중진 안규백(사진) 의원이 임명됐다.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8일 안 의원을 전략공관위원장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총선 120일 전까지 전략공관위를 구성하게 돼 있다. 전략공관위원장엔 안 의원이 임명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임명 후 페이스북에 “당의 승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후보를 추천하겠다”며 “전략선거구를 최소화함으로써 당원동지께서 직접 추천하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는 선거 전략상

특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 선정을 위해 전략공관위를 최고위 의결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략공관위 심사 결과에 따라 전체 선거구 수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략공천 대상 지역은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와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결과와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공석인 선거구 △선거구 분구로 공석인 선거구 △후보자 본인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서 패배한 지역 등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총선 본격 레이스...’

1면서 계속 순천의 경우 출마예정자들의 물밑 논치싸움이 치열하다. 순천 광양곡성구례갑·을(2석)이 순천갑·을(2석), 광양곡성구례(1석) 등 총 3석으로 늘어나면서 출마예정자들이 어디에 출마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순천갑·을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역의원들도 지역구 선정을 놓고 고심 중이다.

특히 순천은 국민의힘의 최대 관심지역으로 여당 출신 출마예정자들의 지역구 선�택도 중대 변수다. 지역에서 입지를 쌓고 있는 천하람 순천광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 순천 재선 의원인 이정현 지방시대

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내릴 지도 주목된다.

다만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확정안을 놓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선거구 확정안 통과까지 여야의 지난한 수싸움도 지속될 전망이다.

공진성 조선대 외교정치학과 교수는 “리더십 경쟁이 없는 현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는 현상이 강해 보인다. 이는 공천권만을 노리는 사람들로 비춰지기 십상이다”면서 “공천권만을 노리는 이들을 광주·전남 민이 적극적으로 지지할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이번 총선의 지역 공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 ‘쌍특검·3대국조’ 뇌관

내년 예산안 막판 줄다리기 민주, 28일 쌍특검 처리방침 노란봉투법·방송 3법 부결

12월 임시국회가 11일 개회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쌍특검법’ 도입, 3대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여야 간 정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확정과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중인 이른바 ‘쌍특검법안’, ‘3대 국조’, 그리고 6개 부처 개각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화폐 등 예산안 증감을 두고 이견이 여전해 타협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R&D(연구·개발)

와 청년 3만원 교통패스, 새만금 예산 등을 놓고 막판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안’은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가장 큰 뇌관이 다.

지난 10월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 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해병대 채도 상병 순직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충돌 지점이다.

여기에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드러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는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내 “윤석열 정부는 강도형 후보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추천한 것으로 무책임을 넘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강도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날 여야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47건의 안건을 4시간 여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혁신위, 오늘 마지막 보고 후 조기 마무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1일 당 최고 위원회의에 ‘지도부·중진·친운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희생)’를 담은 마지막 혁신안을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혁신위가 6차례에 걸쳐 제안한 희생 혁신안 등을 조만간 들어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등

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지난 6일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에서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공관위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긴 호흡으로 지켜봐주시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국민 뜻을 받들고 이기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 할 것인가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조기 해산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김 대표가 공관위 출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김선욱 기자